

건축도시 정책동향

Vol. 083

건축·도시 AURI POLICY UPDATES

- 법·제도 동향
- 계획추진 동향
- 사업추진 동향
- 시스템구축 및 기타 동향

건축도시정책동향 Vol.83

발행	건축공간연구원(auri)
발행인	이영범
발행일	2022년 6월 22일
ISSN	2635-5140
기획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집필진	이종민, 방보람, 장창희
주소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8층
연락처	044-417-9868
이메일	brbang@auri.re.kr

[안내]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우름 사이트(www.aurum.re.kr)'에 접속하면
건축·도시 관련 분야 최신 정책정보를 더욱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Contents

Vol.83

2 **건축·도시 분야 법·제도 동향**

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공포
국토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전면 재정비
대전광역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필지의 건축을 위한 진입로 개설 허용' 건의
울산광역시, '공개공지 조성 및 관리 내실화 제도' 개선 방안

8 **건축·도시 분야 계획추진 동향**

행안부, '2022년 여름철 태풍·호우·폭염 종합대책' 마련
행복청,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사업 주요계획' 발표
서울특별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경상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12 **건축·도시 분야 사업추진 동향**

국토부, 2022년 지역개발 공모사업 추진
국토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활용가치 향상
국토부, 도시철도 신림선(영등포구 셋강역~관악구 관악산역) 개통
국토부,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TF) 출범
국토부, '제3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국토부, 단위면적당 건물에너지사용량 꾸준히 감소
행안부, 청년마을 사업 본격 추진
행복청, 제3기 행복도시 공공건축가 출범
광주광역시, '2022년 도시숲 조성사업' 일제 점검

울산광역시,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경기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정책 추진
충청북도, 숲가꾸기 사업 본격 추진
충청남도, '더 행복한 삶의 숲' 조성사업 추진
경상북도, 행안부 주관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으로 경주, 의성, 예천 선정
경상남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 목욕탕 굴뚝 정비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안심(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아라안심길' 진행

건축·도시 분야 시스템구축 및 기타 동향

27

행안부, 빅데이터분석으로 공공시설 입지 선정
국토부, 30일부터 토지수용결과 온라인 열람 실시
광주광역시, 주거복지 통합정보 온라인 플랫폼 '광주주거복지포털' 오픈

건축·도시

AURI Policy Updates

2022년 5월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시·도에서 발표한 건축·도시 관련 분야 보도자료를 관련 주제, 진행 현황, 담당 기관별로 구분하고,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하여 제공합니다.

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공포

부동산산업과. 2022.05.09.

국토
정책

도시
정책

국토교통부는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5월 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투자자·종사자 교육 등에 관한 협회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업계의 자율규제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토지정책관은 “최근 몇 년 간 리츠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업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 적극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임대주택리츠의 임대보증금 관련 규제 개선	- 리츠는 자산의 70% 이상을 현금 등이 아닌 부동산으로 구성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임대보증금으로 유입된 현금은 규제대상 제외
자산관리회사의 자기자본(70억) 요건 미달 시 인가취소 규정 합리화	- 신설 또는 운영 중 일시적으로 자기자본 요건에 미달된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 인가 취소의 예외사유로 규정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협회 역할 확대	- 협회 업무로 리츠 투자자 교육 및 업계 종사자 준법·윤리교육 등을 추가하고, 자산운용전문인력에 대한 변경관리 업무를 위탁
리츠에 대한 공적 투자자 범위에 “교정공제회” 추가	- 모든 리츠는 일반국민 공모의무가 있으나, 국민연금 등 연기금 투자 시 공모 면제

국토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

주택건설공급과. 2022.05.18.

건축
정책

주택
정책

환경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5월 2일)하여 검토 전문기관을 전문인력과 노하우 등 전문역량을 보유한 민간기관, 지방공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검토업무를 수행하던 한국에너지공단은 운영상황 모니터링 및 점검·관리하는 운영업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제도개선, 교육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공공 위주의 에너지절약 검토업무를 민간까지 확대되면서 민간부문의 역량 강화는 물론, 검토업무 전담 인력의 채용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외에도 지방공사, 민간기관까지 전문기관 지정을 다각화하여 지자체·사업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대민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전문기관의 검토 및 제도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추진하여 검토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균형발전과. 2022.05.29.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과 관련한 총 10건의 법 제정안이 의원발의 되었으며,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제정되었다.

지금까지 지역 인구감소 위기가 드러나는 상황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인구 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내용

주요 내용
- 국가와 자치단체는 인구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본계획(5년 단위)과 시행계획(1년 단위)을 상향식으로 수립한다.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응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거주하는 주민뿐 아니라 통근, 통학,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국가와 자치단체가 이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토록 한다.
- 인구감소지역은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해 다른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한다.
- 국가와 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지원한다.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전면 재정비

도시관리과. 2022.05.09.

건축
정책

주택
정책

도시
정책

서울특별시가 지난 20년 간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규제로 작용해온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재정비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지원적 성격의 계획으로 전환한다. 1980년대 도시설계를 시작으로 도입돼 2000년 법제화된 이후 20년 넘게 운영되면서 누적된 불필요한 규제, 이른바 ‘서랍 속 규제’는 꺼내서 폐지하고, 급변하는 도시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계획을 이끌기 위해 인센티브 등을 개선한다. 줄일 수 있는 절차는 최대한 줄이고, 지역별로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에도 중점을 뒀다.

개정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주요 내용은 ①역세권 사업 기준완화 ②저층주거지 계획기준 개선 ③국공유지 처리방식 개선 ④불합리한 높이규제 개선 ⑤민간부문 시행지침 개선 ⑥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유도 등이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역세권사업 기준완화	- 특별계획구역 내 역세권사업 운영기준에 입지, 면적, 접도, 비주거용도비율, 채광방향 높이에 대한 완화 근거를 새롭게 마련
저층주거지 계획기준 개선	-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공공사업 연계 의무화, 소규모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규제완화·인센티브 신규도입 등
국공유지 처리방식 개선	- 공원·주차장·임대주택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받는 방식(무상양도)도 병행 검토하도록 개선
불합리한 높이규제 개선	-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아파트 높이계획 기준을 폐지해 법령과 심의로 대체 - 2종(7층)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평균층수 산정방식도 ‘동별 최고층수 기준’에서 ‘코어별 층수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개선
민간부문 시행지침 개선	- 지역별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것에서 탈피해 자치구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자율성을 보장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유도	-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치구별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등과 연계해 신속한 계획 수립을 유도

대전광역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필지의 건축을 위한 진입로 개설 허용’ 건의

도시계획과. 2022.05.23.

건축
정책

도시
정책

대전광역시는 2022년 상반기 지자체 규제개선 과제로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필지의 건축을 위한 진입로 개설 허용’ 건의를 국토교통부에서 수용하여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 시에 막다른 도로에 접해있는 경우, 그 길이에 따라 폭 2~6미터의 도로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GB) 내 진입로 설치하는 주택 등의 건축물이 개발제한구역 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지구 내 막다른 도로에 접하는 주택 등을 신축하려는 경우, 막다른 도로 폭이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도로 폭*보다 좁은 경우에는 건축물 신축이 어려웠다.

*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하며, 막다른 도로의 경우는 그 도로의 길이에 따라 다음의 너비를 갖추어야 함

→ 10m 미만 : 2m / 10m~35m 미만 : 3m / 35m 이상 : 6m(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4m)

대전광역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역 143개소 중 45개소 53필지가 기존 진입도로 협소로 건축물 신축이 어려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건의하여왔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올해 12월말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 ‘공개공지 조성 및 관리 내실화 제도’ 개선 방안

시민신문고위원회. 2022.05.30.

도시
정책

환경

도심 속 쉼터인 공개공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개공지 조성 및 관리 내실화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 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공개공지전수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 총 159개소의 공개공지를 확인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울산광역시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여 계획단계부터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활동성, 지역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유형별 조성 원칙 및 시설물 설치기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미세먼지, 폭염, 한파 등 다양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내형 및 고층건물 옥상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옥상형 등 울산에 적합한 공개공지 유형을 추가로 제시했다. 또한, 관내 일부 공개공지에는 안내표지가 없거나, 안내판의 내용, 설명, 디자인 등이 제각각으로 설치되어 시민들이 쉽게 공개공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상징성·시인성 등이 우수한 표준화된 안내판 디자인(안)을 개발·제시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공개공지가 조성 목적과 취지에 맞게 조성·관리되어 시민들에게 보행, 휴식, 문화, 여가, 소통, 편의 등 다양한 형태의 열린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건축·도시분야 계획추진 동향



행안부, '2022년 여름철 태풍·호우·폭염 종합대책' 마련

자연재난대응과, 기후재난대응과. 2022.05.13.



정부는 태풍, 호우,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 참여를 확대시키고 위험정보 사전 제공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태풍·호우·폭염 종합대책'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마련하여, 지난 5월 9일(월) 설명회를 통해 공유하고, 5월 15일부터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 방통위, 행안·교육·과기·국방·농식품·환경·국토부 등 20개 중앙부처, 5개 유관기관, 17개 시도 등
지난해 장마 기간(17일, 역대3위)은 짧았지만, 지역 간 강수량의 편차가 크고 특정 기간(7월 장마, 8월 기압골·태풍 '오마이스' 등) 강수가 집중되어 남부지방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 인명피해 5명(사망 3, 부상 2) 재산피해 622억 특별재난지역선포(21.7.22 전남 7개(3개군, 4개 읍·면), '21.9.6, 경북 포항)

올 여름철 기상 전망에 따르면, 강수량은 평년(622.7~790.5mm)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기 불안정으로 지역별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기온은 평년(23.7℃)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산사태, 사면 붕괴, 하천 급류 등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을 재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민 사전대피, 사각지대 관리 강화 등 현장 중심의 인명피해 최소화 역점을 두고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행복청,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사업 주요계획' 발표

공공청사기획과. 2022.05.2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5일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사업 현황과 주요계획을 발표하였다.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문화기능을 확충하고, 나아가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16년부터 2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국립박물관단지를 건립하고 있다.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사업은 2007년 행복도시 개발계획에 반영된 이후, 2011년 국립박물관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국립박물관단지 2단계 사업은, 사업계획 확정을 위해 현재 국립민속박물관 이전사업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립박물관단지가 조성되면 금강을 중심으로 국립세종수목원, 금강보행교, 세종예술의전당 및 세종중앙공원으로 이어지는 문화공간이 완성된다. 행복도시의 문화기능이 더욱 확충되며 지방의 문화기반구축 등 국가균형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3가지 중점 추진사항]

구분	주요 내용
목표된 기간 내 국립박물관단지 완성	- 2022년 어린이박물관, 2024년 도시건축박물관, 2025년 디자인박물관과 디지털문화유산센터 그리고 2027년 국가기록박물관의 준공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2027년까지 국립박물관단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
국립박물관단지 통합 운영기반 마련	- 행복청은 5개 부처의 개별 박물관이 집적된 국립박물관단지를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인 기반을 준비 중
국민과 함께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행복청은 박물관의 실제 이용자인 국민 중심의 박물관단지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 올해 4월에는 충남대, 홍익대 등 4개 대학 9명의 건축전공 대학생참여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 대학생참여단은 11월까지 박물관별 설계 및 시공 공정회의에 참여하여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에 함께할 예정

서울특별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도시활성화과. 2022.05.19.

건축
정책

도시
정책

주택
정책

서울특별시는 2022년 5월 18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재개발부문)(이하 2025 기본계획) 변경(안)'이 수정가결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2025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2019년 10월부터 3년 한시로 운영해 오던 주거용적률 확대의 유효기간을 2025년 3월 27일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서울특별시는 주택공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여전하고, 정비사업의 특성상 정비계획 확정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에 약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이미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거 주용도 신규사업의 지속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당 정책의 유효기간 연장을 결정하게 되었다.

아울러, 그간 이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보완책도 마련했는데, 주거비율 완화에 따라 건립하는 공공주택 확보기준을 명확히 하고, 4대문 안 지역의 경우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확보의무가 제외된다.

서울특별시는 본 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됨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주거 주용도 사업계획이 전면 무산되는 정비사업의 추진 기간을 추가 확보하여, 실수요가 많은 중심지에 주택이 효과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건축주택과. 2022.05.17.

건축
정책

도시
정책

경상남도는 지역 정체성을 담은 한옥·근대건축물·산업구조물 등 ‘건축자산’을 발굴하고, 우수건축자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건축자산의 체계적 보전·관리와 활용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경상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에는 건축자산 진흥 목표 및 기본방향, 건축자산 기초조사, 경상남도 건축자산 목록, 우수건축자산 후보군 목록 및 관리방안, 건축자산의 활용 등을 위한 주요 사업 및 세부계획 제안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전에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와 도민의 참여를 통해 가치가 있는 건축자산을 추가로 발굴하였다. 특히, 건축자산에 대한 역사적·예술적·경관적·사회문화적 가치 등을 평가하여 특색이 뚜렷하고 보존 및 활용 가치가 높은 30개소는 ‘우수건축자산’ 후보군으로 선정하였다.

시행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건축자산 현황을 도시재생사업에 반영하는 등 경상남도 및 시군에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축·도시분야 사업추진 동향



국토부, 2022년 지역개발 공모사업 추진

지역정책과. 2022.05.03.



국토교통부는 지방 낙후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활성화 거점을 발굴, 조성하는 등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2022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인구, 인프라 등이 열악한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맞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세제·규제특례 등을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와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으로 구분된다.

투자선도지구는 교통, 인프라 등 입지가 양호한 곳에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산단, 관광단지 등 중심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 내 대규모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등을 유입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15년부터 순창(발효산업), 진도(해양관광), 청주(화장품) 등 18개 투자선도지구를 선정하여 추진 중으로, 올해도 지역특산물, 대학연계 등 낙후지역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2개소 이내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공공임대주택과 생활SOC, 지역 일자리가 결합된 주거플랫폼을 추진하여 지역에 필요한 생활편의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역개발공모사업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6월 30일(목)까지 지역개발 통합모니터링시스템(rdims.lh.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사전 컨설팅을 통해 계획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활용가치 향상

사업총괄과. 2022.05.05.

국토
정책

도시
정책

국토교통부는 '21년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379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적재조사 시행 전과 비교하여 사업 완료 이후 토지 활용가치가 대폭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1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역을 대상으로 정밀한 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국가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전·후 지적도면과 각종 주제도를 중첩하여 분석한 결과, 토지의 형상이 불규칙한 토지 102,751필지를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정형화 하였으며, 건축물이 타인의 토지에 저촉되어 분쟁소지가 있는 47,214필지의 경계를 바로 잡았고, 지적도에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도로와 인접하지 않던 8,396필지를 도로에 접하도록 하여 불편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1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토지소유자(11,411명)를 대상으로 사업 공감도 및 사업결과 만족도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토지소유자의 93.7%가 지적재조사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토지소유자의 89.8%가 지적재조사사업 결과에 만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항목 모두 전년 조사 결과대비 각각 1.2%, 7.7% 상승되었는데, 이는 책임수행기관제도 도입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국책사업 등과 협업추진을 통한 사업 시너지 효과, 경계설정합의서 제출기한 연장 등 행정절차 완화 등에 따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도시철도 신림선(영등포구 뚝방역-관악구 관악산역) 개통

광역시설정책과. 2022.05.25.

국토
정책

도시
정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영등포구 뚝방역(여의도)과 관악구 관악산역(서울대학교)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신림선이 5월 28일 개통된다고 밝혔다. 신림선은 지하철 9호선 뚝방역부터 1호선 대방역, 7호선 보라매역, 2호선 신림역을 거쳐 관악산(서울대학교)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7.76km, 11개 역사로 구성된 노선으로 '17년 3월 착공하여 5년 3개월 만에 개통된다.

신림선이 개통되면 해당 지역을 동서로 횡단하는 서울 지하철 1, 2, 7, 9호선을 남북으로 관통함으로써 서울 서남부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출·퇴근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신림선에는 그동안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 개발(R&D)을 통해 개발된 국산 기술이 다수 적용되는 등 기술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앞으로 '수도권 30분내 출퇴근' 실현 및 '춤춤한 대중교통망 구축'을 위해 철도, BRT, 환승시설 및 광역버스 준공영제, 알뜰교통카드 등 다양한 광역교통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신림선 도시철도 노선도 이미지]

국토부,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TF) 출범

도시재생정책과. 2022.05.31.

건축
정책

국토
정책

주택
정책

도시
정책

안전

국토교통부는 국정과제*에서 밝힌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5월 30일(월)에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였다.

*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국정과제 7번)

1기 신도시는 개발 후 30년이 경과하면서 기반시설 부족, 건축물 안전, 도시 경쟁력 약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1기 신도시의 현황을 정확히 진단·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신도시 계획의 특성과 광역교통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의 수립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을 구성해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입법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전담조직의 팀장은 김호철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와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이 공동으로 맡게 되며, 팀원으로는 1기 신도시 재정비에 필수적인 도시계획, 주택, 부동산 금융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국토부·경기도의 정책담당자,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부동산원·경기주택도시공사 등 향후 재정비 사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국토부, '제3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건축정책과. 2022.05.31.

건축
정책

도시
정책

환경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건축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제3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6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최한다.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은 우리나라 건축공간 품격 향상 및 건축 분야 발전을 위해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건축정책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자 '2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공공 건축 혁신, 소규모 건축물 품질 향상, 빈집·방치건축물 정비를 통한 문화공간 조성 등 제1회 공모전에서 국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향후 5년간의 국가 건축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건축정책기본 계획('21~'25)'에 주요 실천과제로 수립되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우리나라 건축과 도시환경의 미래 구상을 주제로 실제 건축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공식 누리집인 '건축정책 아이디어 플랫폼'(<https://idea.aurum.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3회
대한민국 미래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건축과 도시 환경의
미래 구상을 담은 아이디어와 제안

공모기간 (3개월)
2022년 6월 2일 ~ 8월 31일

참여자
전국민 누구나 가능(청년, 청소년 참여시 우대)

참가요령
동영상 5분 이내, 포스터 A1,
에세이 4페이지 이내

참수방법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http://idea.aurum.re.kr>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시상계획안
총 용액 850만원

구분	연수	수량	보통 용액
대형	1	최소 300만원 이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
중형	1	최소 200만원 이상	국토교통부장관상
우수상	1	최소 100만원 이상	건축공간연구원장상
장려상	5	최소 50만원 이상	대한건축학회 회장상, 대한건축신문사 회장상, 한국건축자재협회 회장상, 한국건축기자협회 회장상,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 자세한 내용은 수상자 방문

문의 : 건축공간연구원 (044-417-9637) 또는 공식홈페이지

주최·주관 국토교통부 (aur) 건축공간연구원

후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기자협회, 한국자재산업기자협회, 대한건축사협회

[제3회 대한민국 미래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국토부, 단위면적당 건물에너지사용량 꾸준히 감소

녹색건축과. 2022.05.31.

국토
정책

도시
정책

환경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정보와 에너지사용량 정보(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바탕으로 발표한 전국 모든 건물의 '21년 에너지사용량 통계*에 따르면 단위면적 당 건물에너지사용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0.12 '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 국가통계 변경승인(제408003호,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의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지역별(광역시도 및 시군구), 용도별(29종), 세부용도별(13종)*, 에너지원별(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로 에너지사용량을 집계하여 매년 5월말 건물 에너지사용량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용도 9종(공장 제외)에서 사용량이 가장 많은 대표 세부용도 선정

전체 에너지사용량에서 주거용이 약 60%(공동주택 43.2%, 단독주택 15.9%)를 차지하며, 비주거용에서는 근린생활시설(13.9%), 업무시설(5.9%), 교육연구시설(4.8%)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이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절반(49%)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중 서울지역은 연면적 비중(17%)에 비해 에너지사용량 비중(22%)이 높아 타 지역에 비해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석탄, 석유 등 전기, 지역난방, 도시가스 외 에너지사용량은 반영되지 않았음

건물부문에서 사용된 에너지를 원(原)별로 분류하면 전기(52%), 도시가스(40%), 지역난방(8%) 순이었으나, 거주형태에 따라 세분하여 살펴보면 주거용은 도시가스(52%)가, 비주거용은 전기(73%)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에너지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행안부, 청년마을 사업 본격 추진

주민참여협업과. 2022.05.16.



청년들과 지역이 상생하여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은 청년들의 활동으로 활력을 되찾는 청년마을 12곳이 새롭게 조성된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최종 사업지로 경상남도 함양군 등 1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12곳 : 강원 속초시·태백시·영월군, 충남 아산시·태안군, 전북 군산시, 전남 강진군, 경북 경주시·의성군·예천군, 경남 하동군·함양군

‘청년마을 조성사업’은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청년들에게 청년 활동공간과 주거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살이 체험, 청년창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33개 청년단체가 응모하였으며, 1차 서면심사를 통해 34개 팀이 선발된 후 현장실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2개 팀이 최종 선정됐다. 올해 선정된 청년마을을 살펴보면 개성 있는 지역자원과 특색 있는 소재를 가진 청년사업이 집중 발굴됐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려는 청년들의 시도도 눈에 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12개 마을을 비롯해 2018년부터 조성된 전국 15개 청년마을이 다함께 참여하는 합동 발대식을 7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마을 조성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행복청, 제3기 행복도시 공공건축가 출범

공공건축추진단. 2022.05.02.

건축
정책

도시
정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 제3기 행복도시 공공건축가를 출범하였다. 제3기 총괄 건축가로는 민경식(민경식건축연구소 대표)건축가가 연임되어 행정중심 복합도시 공공건축 품격 향상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제3기 공공건축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공사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자문·조정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공공 건축가 중 일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총괄자문체계 건축위원으로 활동하며 도시 전반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제3기 공공 건축가의 임기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2년이며, 공공건축가 선정 명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하다.

광주광역시, '2022년 도시숲 조성사업' 일제 점검

녹지정책과. 2022.05.06.

도시
정책

환경

광주광역시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2022년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사항을 일제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시민에게 균등한 녹색복지의 실현으로 시원하고 푸른광주 만들기를 위해 올해 추진 중인 '녹지 한평 늘리기', '겉고싶은 명품가로숲길 조성',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등 도시숲 조성 관련 10개 사업(사업비 165억여 원)으로, 추진사항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예산집행의 목적 외 사용 여부, 재정신속집행 등 추진상황, 성과관리 등 시책 관련 사업 적기 추진, 사업추진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과 더불어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누릴 수 있는 도시숲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울산광역시,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토지정보과. 2022.05.31.

국토
정책

도시
정책

울산광역시는 5월 31일 오후 2시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 위원회'를 열어 '2022년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을 심의 확정한다. 이번에 지정될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는 중구 서동1지구 등 8개 지구, 1,890필지(68만 8,074㎡)이다. 사업비는 국비 4억 5,994만 원이 투입된다.

앞서 울산광역시는 지난해 10월 복구를 시작으로 동구, 울주군, 중구, 남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책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지적도면을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는 작업으로 지난 2012년 착수, 오는 2030년 완료된다.

한편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은 '책임수행기관제도' 도입으로 민간 대행자와 책임수행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이 지적재조사측량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한다. 민간대행자는 경계점 측량을 실시하고 책임수행 기관이 경계설정 및 경계협의를 진행한다.

울산광역시는 지난 2012년부터 총 사업비 30억 2,830만 원을 들여 남구 고사지구를 비롯한 50개 지구, 1만 826필지(1,178만 4,814㎡)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경기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정책 추진

주택정책과. 2022.05.11.



경기도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되는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166호 우선 입주와 임대보증금 등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매년 경기도에서는 40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이른 나이에 퇴소(종료)하고 있으며, 이 중 정부의 주거지원(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 등)을 받는 인원은 절반 정도에 그친다. 나머지는 위탁가정이나 전·월세 형태에 의존하고 있어 사회 적응이나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와 주거비 지원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한다.

올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 물량으로 전세임대 63호, 청년매입임대 66호, 행복주택 37호 등 총 166호를 배정해 우선 입주 지원한다. 지난해 계획물량 103호보다 지원 규모가 63호 늘었다. 주택유형별로 주거비 지원도 병행한다.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의 100%(최대 1억 2천만 원)를 지원해 무료로 입주할 수 있다.

경기도, 자립준비청년에게 주거지원 정책 추진

대 상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되는
18세 이상의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정책

-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총 166호 확보
- 전세임대보증금 무료 또는 대출이율 50% 인하를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
-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전세금 대출이자, 주거급여, 청년월세 등 맞춤형 주거비 지원
- 도배 장판, 생필품(이불, 식기 등) 등 입주 지원 & 자립지원전문가 상담 지원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정책
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청자격 등
자립지원전문가 상담

☎ 경기도 주택정책과 031-8008-4930
☎ 경기주택도시공사(GH) 1588-0466
☎ 경기도 자립지원전문기관 031-346-9312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포스터]

충청북도, 숲가꾸기 사업 본격 추진

산림복지과. 2022.05.02.

국토
정책

도시
정책

환경

충청북도는 산림을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림순환경영을 확대하고,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수요에 맞춘 기능별 ‘숲가꾸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숲가꾸기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291억 원으로 작년 202억 원보다 44% 증액됐으며, 세부사업으로 조림지가꾸기 13,360ha, 어린나무가꾸기 1,200ha, 큰나무가꾸기(경제림) 800ha, 산불예방 숲가꾸기 250ha,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400ha, 통합형 도시숲가꾸기 100ha를 실시한다.

올해는 산림사업으로 발생하는 산림부산물 중 원목 지름이 6cm 이상인 부산물은 최대한 수집하고, 임내에 남아있는 나뭇가지는 지면에 밀착되도록 단목처리하거나 횡식으로 정리해 산림사업지 내 산물을 완벽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각 시·군의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및 산림패트를 인력으로 주민 생활권 인근의 산림재해 위험요인도 최대한 제거할 계획이며, 산림 내 부산물 수집을 통한 산불예방과 피해목을 처리해 풍수해로 인한 도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청북도가 산림청에 제안해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경관형 숲가꾸기 사업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관형 숲가꾸기사업은 숲가꾸기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도내 3개 시·군(충주, 괴산, 단양)에 가지치기와 정리작업을 포함하는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숲을 조성함으로써, 임목의 생육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부수적으로 국민들에게 쾌적한 숲 공간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충청남도, '더 행복한 삶의 숲' 조성사업 추진

산림자원과. 2022.0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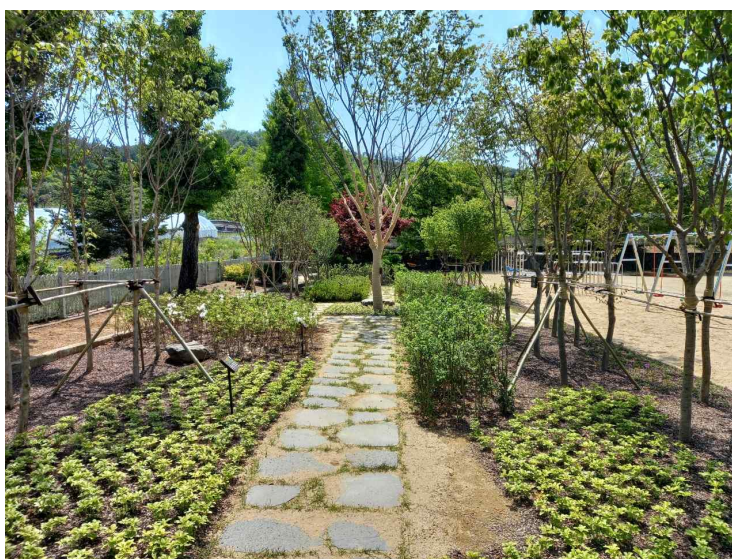
국토
정책

도시
정책

환경

충청남도는 2025년까지 총 1,142억 원을 투입하는 '더 행복한 삶의 숲'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녹색공간 확충으로 도심지 열섬현상,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추진한다.

도는 지난해부터 도심지 등 주민 생활권 주변의 녹색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는 110억 원을 투입해 도시숲 12곳, 학교숲 19곳, 명품가로숲 8곳(18km)을 조성한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도심지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녹색쌈지숲 3곳과 도시림 내 산림공원 조성 5곳, 폐도 등 녹색경관 유지를 위한 복합산림경관숲 2곳,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생활환경숲 2곳 등이며 67억 원을 투입한다. 학교숲은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생태적 감수성 증진을 위해 운동장 등 교내 공간을 활용해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5억 원을 투입해 공주정보고 등 19개교에 학교숲을 조성한다. 명품가로숲은 도심지 등 생활권 주변의 가로환경을 지역 특색에 맞게 거리경관을 연출하기 위해 18억 원을 투입한다.



[‘더 행복한 삶의 숲’ 조성 이미지]

경상북도, 행안부 주관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으로 경주, 의성, 예천 선정

청년정책관. 2022.05.16.



경상북도는 올해 행정안전부 주관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에 전국 12개소 중 3개소(25%)가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마을은 경주 가자미마을(감포읍), 의성 로컬러닝랩:나만의-성(의성읍), 예천 생텀마을(효자면)이다. 전국 133개소가 신청해 11 대 1의 엄청난 경쟁률 속에서 서면·현자·발표 등 험난한 심사를 뚫고 최종 선정됐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지방 청년들의 유출 방지와 도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해 인구감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이번 3개소의 신규마을 선정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6개소의 청년마을을 조성하게 됐다. 올해 선정된 마을에는 청년활동 공간 조성 및 청년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개소 당 3년간 국비 6억 원(매년 2억 원) 총 18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경주 가자미마을은 감포의 대표자원인 가자미를 매개로 식당, 영화제작, 마을여행 등 리얼 버라이어티 예능 컨셉의 정착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의성 로컬러닝랩:나만의-성은 사회문제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주민의 불편함을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지역 상품 개발과 크리에이티브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경북의 ‘이웃사촌시범마을’의 성과를 경험으로 가시적인 청년인구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예천 생텀마을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힐링·명상 등을 통해 청년을 살리는 ‘힐링 청년마을’이라는 독특한 구상으로, 청년주도의 웰니스 문화산업을 선도할 예정이다.

경상남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 목욕탕 굴뚝 정비사업 추진

건축주택과. 2022.05.06.

건축
정책

도시
정책

환경

안전

경상남도는 노후화한 도내 목욕탕 굴뚝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노후굴뚝 철거 등 정비를 추진한다. 특히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위험도가 높은 굴뚝을 철거하는 시·군에는 경상남도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정비를 독려한다.

도내 목욕탕 굴뚝 대부분은 준공 이후 20년 이상 지나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로 철거 등 정비가 필요하지만, 안전관리 의무가 있는 소유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목욕탕 운영 어려움으로 재정난을 겪어 자체 철거가 힘든 실정이다. 날이 갈수록 목욕탕 노후화가 심각해져 철근노출 및 콘크리트 파편 낙하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경상남도는 지난 2월 15일 방치된 노후 굴뚝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도내 407개소를 안전점검 하였다. 안전점검 결과 42개소(자진철거1, 안전진단24, 안전조치 15, 권고2)는 행정조치를 요구한 상태로, 시·군에서 소유자에게 자진철거 요구 및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소유자 스스로가 노후굴뚝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한다. 행정지도 결과, 위험도가 높은 굴뚝을 철거하는 시·군에는 경남도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특별조정교부금 인센티브로 재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공중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 건축물 등은 연차적으로 정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경상남도는 향후 현장점검에 필요한 열화상카메라와 전자 내시경 등 계측장치를 도입하여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안심(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아라안심길' 진행

도시디자인담당관. 2022.05.04.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안심마을 조성을 위해 제주시 아라동 일대를 대상지로 생활안심(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인 '아라안심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은 범죄에 취약한 지역과 장소를 정비하고, 안전 시설물과 조명을 개선해 범죄 발생 우려를 최소화함으로써 범죄예방에 효과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다양한 조명시설과 범죄 발생 빈도나 범죄 불안감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방범 카메라(CCTV)를 설치하고, 아라초등학교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볼라드와 안전펜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마을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주경찰청과 공동으로 범죄예방 교육을 진행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의 추진과정과 도입 필요성 등을 주민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현재 아라안심길에 대한 1차 주민설명회에 이어 2차 주민설명회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고, 4월 29일부터 일주일간 온라인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 시설계획도 및 디자인(안)과 영상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 공지

행안부, 빅데이터분석으로 공공시설 입지 선정

통합데이터분석센터. 2022.05.04.

국토
정책

도시
정책

행정안전부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분석으로 ‘표준분석모델’을 개발하여 공공자전거 대여소 등 공공시설물 입지선정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공공시설의 입지적합도를 분석하여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분석모델’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유동인구, 상주인구, 교통과 공공시설 입지 간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권, 건축물, 등록인구, 교통시설 등 40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자전거 대여소의 입지는 대중교통 요인이 중요하였으며, 설치에 적합한 장소의 80%는 50m 이내에 버스정류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중교통이 활성화된 장소가 대여소 입지에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택배함 설치적합도가 높은 지역은 30대부터 50대까지의 세대가 주축인 주거지역이었으며, 20대 인구는 택배함 수요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었기에 경제활동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지역은 거주인구와 소상공인이 상대적으로 적고 분산된 원도심 지역이었으며, 1km²내에 3,000명 이하의 인구와 300개 이내의 소상공인 사업체가 산재 된 형태를 보였다.

*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를 의미함, 대리기사, 배달원(라이더) 등

대전광역시시는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공공자전거 대여소 261개소를 포함하여 739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경기도 용인시는 택배함과 전기차충전소 추가 설치에 입지선정 모델을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30일부터 토지수용결과 온라인 열람 실시

중토위사무국. 2022.05.25.

국토
정책

도시
정책

5월 30일부터 토지보상 수용 결정문인 ‘재결서**’를 온라인에서 쉽게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게 된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판결한 사건에 대해 검토·의결한 내용이 담긴 문서

국토교통부는 토지수용에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판결문인 재결서의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토지수용 재결 및 이의재결과 개발부담금 등의 행정청의 부과 처분에 대한 특별행정심판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지난 1962년부터 설치·운영 중에 있다.

그동안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수용에 관한 수용·이의 재결과 특별행정심판에 따른 재결서를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서면으로만 송달 해왔으며, 재결서를 분실하는 경우 서면을 통해 재결서 재발급을 요청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신청인이 필요할 때마다 온라인에서 재결서를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중앙토지위원회는 이번 재결서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시작으로 토지수용에 관한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재결정보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도 올해 7월부터 추진한다. ‘차세대 재결정보 시스템’이 구축되면 온라인을 통한 재결 신청, 재결서 전자 송달 등 토지수용에 관한 모든 행정이 온라인으로 처리되어 토지수용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와 함께 국민의 권익 보호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광역시, 주거복지 통합정보 온라인 플랫폼 '광주주거복지포털' 오픈

주택정책과. 2022.05.20.

국토
정책

도시
정책

광주광역시가 주거복지 통합정보 온라인 플랫폼 '광주주거복지포털'을 20일 오픈했다. '광주주거복지포털'은 광주시가 지난 6월 개소한 광주종합주거복지센터와 함께 자치구, 광주시 및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주거복지 혜택 및 주택관련 금융지원 서비스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구축했다. 주요 서비스는 주거복지안내, 청년·신혼부부 지원, 주거비 및 금융지원, 자가진단, 공공임대주택찾기, 커뮤니티 등이다.

특히 자가진단을 통한 맞춤형 주거서비스 지원은 본인의 소득·자산 등을 조회해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안내 뿐 아니라 로드뷰(Road view) 기능을 통한 해당 주택의 현장 위치 확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밖에도 다양한 공공임대 현황,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거 및 금융지원서비스, 자치구별 주택개량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광주도시공사(광주시)와 LH(중앙정부)에서 분양·임대하는 광주시 전역의 공공주택 공고문도 한곳에서 볼 수 있다.

또 '광주주거복지포털'을 반응형 웹으로 구현해 컴퓨터(PC), 스마트폰, 태블릿피시(PC) 같은 모든 스마트기기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도 연계돼 관심 있는 주거정책 콘텐츠를 쉽게 공유할 수 있다.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자료와 정책정보 및 학술연구정보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 제정 이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록자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학술문헌 및 연구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 분야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43, KT&G세종타워B 8층,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formation center,
KT&G Sejong Tower B 8F, Gareum-ro, Sejong-si, 30116, Korea

